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의당, 통신·시민사회단체 합동 토론회



일 시 | 2015년 6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 최 | 정의당, 통신공공성포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주 관 |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심상정 국회의원

진행

■ 인사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 진행

좌 장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위원장)

발표 1 기본요금제 폐지 및 데이터요금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

이해관_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발표 2 최근 주요 통신 정책 추진 상황

류제명_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발표 3 최근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하여

안진걸_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토 론 이현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최 현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국장)

목 차

인사말

| | |
|--------------|---|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 5 |
|--------------|---|

발표문

| | |
|---|----|
| 발표문 1 : 기본요금제 폐지 및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 | 8 |
| 이해관_통신공공성포럼 대표 | |
| 발표문 2 : 최근 주요 통신정책 추진현황 | 18 |
| 류제명_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이용과장 | |
| 발표문 3 : 최근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대책 및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해 | 19 |
| 안진걸_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

토론문

| | | |
|------|-------------------------|----|
| 패널 1 | 이현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 51 |
| 패널 2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55 |
| 패널 3 |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57 |
| 패널 4 | 최 현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국장) | 58 |

인사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인 사 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통신3사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SKT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인 '밴드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뒤로 통신 3사는 모두 유무선 통화 무료를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나름 환영할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통신3사와 미래부의 이러한 요금 인하 정책 도입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요금 인하 정책의 이면에 대해서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는 마케팅비 절감과 LTE 가입자 확대에 의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KT는 지난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3,200억원으로 130%나 뛰었고, LG U+도 1,547억원으로 36% 늘어났고 SK텔레콤은 4,0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요금제 출시를 단말기 유통법 도입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라는 점에서 진즉에 시행되었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요금제에도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이 통신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최근 3G보단 4G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데이터 소비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 국민 데이터 소비량의 평균이 2.23Gigabyte로 알려져있지만 4G 사용자들의 데이터 소비량 평균은 이미 3.36Gigabyte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데이터 소비량 평균은 4Gigabyte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SK텔레콤에서 출시한 밴드 요금제에는 4Gigabyte와 5Gigabyte 데이터 요금제가 없어서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값비싼 6Giga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통신사 3사의 담합에 의한 꼼수로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정부와 통신3사가 이번 요금 인하 과정에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본료 1만1천원은 망설치 등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통신3사가 망 설치가 이미 완료된 지금까지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3사의 담합으로 인해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민 하에 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알뜰폰 활성화 등을 담아낸 이번 개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통신 요금 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획기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통신비 인하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모두 논의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통신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던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님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 처장님의 발표는 기본요금제 폐지와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직접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류제명 과장의 발표 역시 기대됩니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진행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총괄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발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패널 토론으로 참석해주신 참여연대 이현욱 민생희망본부장님,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님, 한양사이버대학 김광재 교수님은 이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꼭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발표문

- 발표문 1 : 기본요금제 폐지 및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
이해관_통신공공성포럼 대표
- 발표문 2 : 최근 주요 통신정책 추진현황
류제명_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이용과장
- 발표문 3 : 최근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하여
안진걸_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발표문1>

기본요금제 폐지 및 데이터 기본 제공을 통한 통신공공성확대의필요성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1. 통신사가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된 까닭은? - 필수 경쟁과 폭리 담합

오늘 날 통신사가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된 데는 가계통신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그 결과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따라 2000년 대 정치권 중심으로 각종 선거 과정에서 통신비 인하가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그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욱 국민들의 통신사들에 대한 반감이 커져온 게 사실임. 특히 통신은 공공성이 매우 강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이 비싸나 마나 이를 사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점에서, 또한 통신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게 수출산업과 달리 철저하게 내수산업이어서 그 이익의 원천이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통신사들에 대한 비판의식은 점점 높아져 왔음.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요구인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국민 혹은 소비자들의 반감에는 구별되는 두 측면이 있음. 하나는 통신사들이 국민을 호갱으로 취급하는 행태로 이는 각종 필수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기만적으로 제한해온 통신사의 마케팅 행태에 대한 반감이고 다른 하나는 날이 갈수록 이익을 키우고 있는 통신사들의 엄청난 폭리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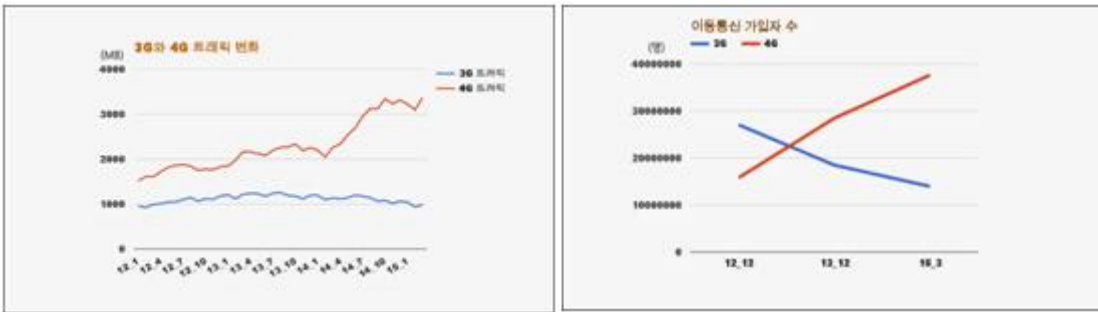
꼼수 영업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는 단통법을 탄생시킨 무분별한 불법보조금을 동원한 영업 행위를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른바 ‘통신대란’과 ‘호갱’이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하였음. 보조금을 미끼로 부가서비스 이용을 요구하거나 비싼 요금제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단통법 이전에 활개를 쳤음은 주지의 사실임. 그리고 이 지점에서 꼼수를 둘러싼 경쟁은 말 그대로 치열한 양상이어서 통신시장은 경쟁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꼼수가 확대되는 양상이었음.

이러한 꼼수영업은 단통법에 의해 상당 부분 제어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단통법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폭리구조 하에서 대동소이한 요금제를 놓고 경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서는 그 한계가 뚜렷함. 특히 매우 유사한 요금제 구조 등을 통신사들이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출시하면서 외견상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 듯 보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통신3사가 늘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오히려 담합으로 비쳐지기도 함. 게다가 요금인하 방안으로 떠들썩한 신규 요금제가 등장하고 통신사들이 수익이 준다며 엄살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통신사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음을 감안한다면, 단통법을 통해 꼼수영업이 제어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을 것임.

이번에 새로 등장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이러한 “경쟁적 꼼수영업과 담합적 폭리구조”의 문제점을 매우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데이터 요금제 출시 이후 통신3사가 쏟아내는 각종 보완책, 예컨대 무제한 통화에 유선을 포함시키는 문제 혹은 특정 요금제와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데이터 사용을 무제한 보장한다거나 동영상 데이터를 별도로 보장하는 것과 같은 보완책들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이 강화되는 측면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된 상품의 설계구조를 보면 경쟁이라기보다는 담합적으로 통신사의 폭리구조가 매우 견고하게 강화된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아래는 <뉴스타파> 기사를 요약한 것임.

지난 3월 말 현재 1인당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2.25GB(기가바이트)로, 이번에

새로 도입한 데이터 요금제라면 4만 원 안팎의 요금이 들게 되지만 여기엔 약간의 눈속임이 들어가 있음. 2.25GB라는 수치는 3G와 4G를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며, 이를 3G와 4G(LTE)로 나누어서 본 1인당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아래와 같음.



3G는 올 들어 986MB로 1GB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4G는 3.36GB를 돌파했음. 그런데 3G는 계속 줄고 있고 4G 사용자는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나, 지난 3월 말 현재 3G는 1,396만 명이고 4G 가입자는 3,720만 명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4GB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보임.

이동통신사 데이터 요금제 비교 (부가세 별도, 단위: 원)

| | SKT | KT | LG유플러스 |
|-------|----------------|--------|--------|
| 300MB | 29,900 | 29,900 | 29,900 |
| 1GB | 36,000 (1.2GB) | 34,900 | 33,900 |
| 2GB | 42,000 (2.2GB) | 39,900 | 38,900 |
| 3GB | 47,000 (3.5GB) | 44,900 | |
| 4GB | | | |
| 5GB | | | |
| 6GB | 51,000 (6.5GB) | 49,900 | 49,900 |
| 8GB | | 54,900 | |
| 10GB | 61,000 (11GB) | 59,900 | 59,900 |
| 15GB | | 69,900 | 69,900 |
| 20GB | 80,000 | | |
| 30GB | 100,000 (35GB) | 99,000 | 99,000 |

*7월 출시 예정

요금표를 보면 4GB와 5GB에 해당하는 요금제는 모든 통신사 데이터 요금제에 없음. 천상 건너뛰어서 6GB대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요금은 5만 원 안팎이 됨. 결국 매우 경쟁적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여전히 통신사들의 담합적 폭리 구조가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경험적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통신3사의 가입자 점유율구조(5:3:2)를 통해서 시장경쟁이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 영남대 박추환 교수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고착된 시장 점유 구조가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박추환 교수,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소비자 후생손실 규모 분석). KISDI 역시 LTE 도입 후 경쟁상황이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익성 격차 고려 시 경쟁이 활발한 상황은 아니며, SKT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KISDI,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2014.11월).

통신 사업자별 매출액 추이(단위 : 억원)

|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SKT | 76,448 | 86,674 | 89,799 | 96,314 | 101,563 | 110,042 | 114,999 | 119,247 | 124,599 | 129,022 | 127,050 | 136,755 | 52.4% |
| KT | 37,555 | 38,249 | 42,469 | 47,471 | 49,776 | 54,328 | 58,946 | 63,145 ¹⁾ | 69,326 | 69,930 | 70,207 | 73,299 | 28.1% |
| LGU+ | 15,091 | 15,821 | 21,147 | 25,356 | 28,169 | 31,680 | 33,809 | 34,796 | 34,794 | 34,650 | 40,993 | 50,704 | 19.4% |
| 합계 | 129,094 | 140,744 | 153,415 | 169,142 | 179,508 | 196,050 | 207,754 | 201,402 | 228,719 | 233,602 | 238,250 | 260,757 | 100% |

이러한 “꼼수경쟁 폭리담합” 구조에서 최고의 수혜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라 할 수 있으며 지난 10년 누적 영업이익만도 30조 원에 육박함. 이런 상황에서 후발 경쟁업체는 요금인하 경쟁을 주도할 여력이 부족하고 지배적 사업자는 시장구조를 혁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지므로 경쟁은 꼼수로 일관하고 폭리구조는 계속 강화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박추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통신3사 동일 점유율(3:3:3)을 가정하면 약 11조원('02~'13년 12년간, '13년 기준 8,500억)의 소비자 후생 증진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통신사별 이동통신사업 영업이익 추이 (단위 : 억원) 출처: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14년)”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합계 |
|------|--------|--------|--------|--------|--------|--------|--------|--------|--------|--------|---------|
| SKT | 29,510 | 33,682 | 27,679 | 26,482 | 29,920 | 32,243 | 35,735 | 32,555 | 24,241 | 25,729 | 297,776 |
| KT | 7,293 | 9,323 | 4,743 | 1,218 | -1,297 | 8,547 | 11,742 | 12,810 | 5,934 | 7,486 | 67,799 |
| LGU+ | 2,312 | 3,791 | 3,123 | 684 | 1,113 | 1,510 | 703 | ▲3,745 | ▲5,934 | ▲3,763 | ▲206 |

그 결과 통신사는 전 국민의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양상임. 즉 경쟁은 치열한 듯 하나 꼼수 경쟁이고 온갖 대책이 난무하지만 통신비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꼼수영업을 제어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담합적 폭리구조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렇듯 시장 경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한다면 폭리구조 전혀 해결 될 수 없음. 단통법이 촉발한 경쟁 활성화는 꼼수 경쟁을 제어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폭리구조를 바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향후 통신비 인하 대책은 폭리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원가 심의제 도입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2 더 이상 가입자에게 손 벌리면 안 될 통신 기본요금

통신사들의 폭리구조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기본요금 폐지 주장임. 현재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본요금 폐지야 말로 확실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이라 할 수 있음.

기본료는 본래 유선통신에서 NTS(Non Traffic Sensitive)에 해당되는 비용, 즉 통화이용도와 상관없이 소요되는 가입자 선로 비용을 위해 부가된 요금체계인데, 무선통신에서는 가입자선로에 해당하는 설비가 없이 무선으로 연결되므로 근본적으로 기본료라는 요금 체계 자체가 타당하지 않음.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포함 현재의 다양한 통신요금제에는 11,000원 내외의 기본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통신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이 기본요금은 초기 투자비가 매우 큰 통신산업의 성격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요금제도로 통신산업 초기에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했음.

실제로 기본요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초기에 통화량은 많지 않고 투자비는 엄청난 상황에서 만들어진 요금체계라 할 수 있음. 이동전화의 초기 서비스는 가입이동

무선전화서비스라고 하였으며, 수동교환방식으로 서울 일원을 대상으로 시설 수 400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1984년부터 자동교환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10,000회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당시의 기본요금은 27,000원이었음(변정욱 외 3인, 네트워크진화와 요금설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특히 통신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가장 확실한 산업임을 감안할 때 과연 10,000회선 당시 27,000원을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가입자가 5,700만 명이 넘어선 오늘 날에도 11,000원씩 징수하는 게 타당한 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음. 또한 통신사들의 망 구축비용과 망 고도화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망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기본요금을 계속 징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

통신사들은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그에 따른 수입 7조원 가량이 줄게 되고 이럴 경우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게 되어 전 사회적인 통신망 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본요금이 7조 원에 이른다는 통신사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든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이동사들이 마케팅비로만 7조 원 이상을 쓰고 있고 이러한 과도한 마케팅비가 비싼 통신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기본요금 폐지는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됨

[이동통신 마케팅비 집행 현황(단위:억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4년)”에서 재인용

| 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
| SKT | 33,260 | 32,360 | 34,740 | 34,280 |
| KT | 25,666 | 25,761 | 25,596 | 26,811 |
| LGU+ | 17,544 | 15,136 | 16,908 | 18,362 |
| 합계 | 77,950 | 73,257 | 77,244 | 79,453 |

더욱이 SKT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기본요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마케팅비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 투자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기본요금이 없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망투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님. 물론 통신 사업자들 간의 이익 규모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기본요금 폐지와 더불어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 등의 대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통신3사 무선 네트워크 투자비(매출액대비 비율)]

| 사업자 | '12년 | '13년 | '14년 |
|------|------------|------------|------------|
| SKT | 2,858(23%) | 2,317(18%) | 1,733(14%) |
| KT | 2,105(31%) | 1,294(19%) | 901(12%) |
| LGU+ | 1,178(30%) | 970(20%) | 1,254(24%) |

단위 : 십억원, % , 출처 : 각사 IR 자료("이동시장 경쟁상황(5:3:2 고착화) 문제점"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현재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 제출한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설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경쟁 활성화를 보장할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기본요금 폐지는 당장 실현 가능한 통신비 인하 방안임.

3.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데이터 사용할 권리를 줄 수는 없을까?

현대 사회에서 정보 격차 문제 해소는 핵심적인 사회통합의 과제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보호를 위한 물질 토대마련에서 더 나아가 구성원들의 다양성 수렴차원으로 사회통합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ICT가 사회변화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격차인 정보격차가 등장하여 사회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게다가 정보격차는 지식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소득불균형과 사회격차로 나타나,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미래창조부가 발표한 2014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되면서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스마트폰 대중화 현상과 정부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 힘입어 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13년 42.8%에서 '14년 52.2%로 상승(전년 대비 9.4%p 상승) 하였으나, 여

전히 전체국민(78.3%)에 비해서는 26.1%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월, 미래부는 이번 정보격차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5년도에는 소외계층의 차별 없는 스마트 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 정보접근성 제고, 소외계층 태블릿 PC 및 모바일 기기 보급 지원,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특히, 오늘 날 국민 일반과 소외 계층 사이의 정보 격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 사용권 보장이 필요함. 데이터 통신을 통한 정보 접근은 오늘날 사회생활의 필수품이 된 만큼 국가가 최소량의 데이터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도로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와 국도처럼 고품질의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유료 데이터 망과 구분되는 최소한의 데이터 사용권 보장이 필요함.

이를 위한 논의가 여러 갈래 있을 수 있는 바,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 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는 통신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와이파이망이 갖는

보안의 취약성과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와이파이가 확대는 보완책일 뿐 이 자체로는 안정적인 데이터 사용권 보장이 어려움. 근본적으로 국가가 전 국민에게 최소한도의 데이터 사용량(예컨대 월 100MB 정도로 시작)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물론 이러한 최소한도의 데이터 사용권을 통신사들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국가가 엄격하게 데이터 사용권 보장에 따른 원가를 통신사들로부터 검증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그 재원은 통신사들의 주파수 사용료에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보편적 역무제공 손실보전금 제도와 같이 국가로부터 데이터 사용량을 전 국민이 보장받음으로써 수혜를 받게 될 인터넷포털사업자, 인터넷쇼핑업체 등 플랫폼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일정액을 부담하게 만들어 이 돈으로 통신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도 적극 고려해 봄직함.

이러한 데이터 통신에 대한 최소 사용권의 국가 보장은 통신공공성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원가공개와 검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될 경우 동일한 데이터 량을 제공하면서도 통신사들마다 원가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돈에 차등이 발생할 것인 바, 이는 자연스레 후발 사업자 보호를 통한 경쟁 활성화의 의미도 갖게 될 것임.

<발표문2>

최근 주요 통신정책 추진 현황 - 별도 복사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발표문3>

최근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정책과 주요 통신이슈에 대해

- 데이터요금의 인하, 데이터제공량 확대, 단말기 거품 제거를 통한
통신비의 대폭 인하가 매우 절실 합니다 -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요약

1. 통신재벌 3사, 데이터요금제도 여전히 너무 비싸요, 꼼수도 참 많아요!!

- 부가세 빼고 저렴한 척, 2만원 대라고 소비자 기만, 국민 속임수 심합니다.
- 최저요금제인 32,900원도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며, 데이터 300MB만 찢끔 제공에 그쳐... 동영상 10분 보고 말라고요?! 32,900원 요금제 가입했어도 데이터를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더 많은 요금이 나올 가능성 커. 왜냐하면 최저요금제인 32,900원에 가입한 이들도 음성, 문자만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서 데이터를 더 쓸 수도 있기에... 이대로 가면 데이터 사용 양극화+데이터 불평등 심화!
- 데이터 좀 쓰려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경우 66,000원은 최소한 지불해야!(통신재벌 3사 모두 데이터무제한이 시작하는 구간은 66,000원 요금제임. 통신재벌 3사 표현으로는 59,900원 요금제)
- 데이터 3~5GB 이용 구간 요금제는 왜 없는 것인가요?(SKT의 경우 3.5GB가 제공 요금대가 있긴 하지만 역시 4~5GB 제공 요금제는 없음)
- 문자음성 무제한이라고 하면서 전국대표번호 등 지능망서비스엔 과금하는 것도 꼼수

2. 통신재벌 3사의 기본요금 폐지가 꼭 필요

- 기존의 스마트폰LTE 정액요금제와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요금 11,000원씩을 폐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기본료 폐지 촉구!!

-
- 기본료는 과도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함. 사용량에 비례해서만 요금을 내는 요금제가 가장 합리적이기에 기본료 즉시 폐지를 추진해야.
 - 즉각적인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한을 두고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3. 단말기 가격 거품과 단말기 요금 폭리도 여전

- 도대체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부와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찬성인자반대인지, 찬성한다면 언제 다시 이를 추진할 것인지 밝혀야. 국회는 정부의 태도와 상관없이 단통법 반드시 개정해야.
- 지원금 상한선을 상향하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말기 가격 대폭 인하! 단말기 가격이 대폭 인하된다면 지원금 수준 논란은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줄어든 지원금이 기본요금 폐지 내지 데이터요금제 인하로 이어져야
- 설령, 지원금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 해도 통신요금은 인하되어야

4. SKT의 절대 독주 및 초과 이익 독점, 각종 불법·부당행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 SKT의 독주와 초과 이익 독점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SKT에 대한 비대칭 규제, 차별적 정책 적극 시행해야
- SKT는 알뜰폰 시장에도 제일 먼저 진출해 각종 불법·부당행위 저질러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 특히 SKT부터 철수시켜야.
- 그뿐만 아니라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케이블방송 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러,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 급등시켜 이것도 큰 문제

5. 알뜰폰(알뜰통신) 활성화 정책

- 정부의 최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긍정적, 알뜰폰 시장 점유율 10% 넘어 20%까지 나아가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 망 도매요금을 원가+적정 이윤 방식으로 계산해 더욱 인하해주고, 알뜰폰 시장에서 통

신재벌 3사는 기한을 두고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

- 알뜰폰의 경우, 알뜰폰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게 설계해야

6. 정부의 최근 정책과 기조에 대한 약평

- 단통법에서 분리요금제 도입과 할인 폭의 12%에서 20%으로의 상향은 매우 긍정적. 예를 들어 66,000원 데이터요금제에서 기간 약정 할인은 안되지만, 분리요금 할인을 선택하게 되면, 52,800원 요금제가 되는 것임.

- 다만, 단통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분리공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의 근본적인 대책,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 또 최근 정부 당국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고 존중. 그러나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 당국이 통신재벌 3사와 휴대폰 제조재벌 2사의 독과점·담합·폭리를 최소한 용인내지 적극 조장했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할 것임.

- 또, 최근 데이터요금제의 경우 일부 긍정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 인하 효과를 과장한 것은 문제가 크고, 기본요금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인하 방안은 나오지 않아.

- 또 통신재벌 3사, 특히 SKT등의 부당한 행위나 꼼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 예를 들면, 부가세 포함 요금제고지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약관 변경 제동 등은 너무나 쉬운 조치임에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 본론 1

1. 들어가며 : 오죽하면 학생들이 SKT 항의방문을 갔을까요?

- 지난 6월 5일(금) 5시, 성공회대 학생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SKT 본사 앞에서,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문제점과 통신3사의 꼼수를 비판하고, 통

신비(통신요금-단말기 가격)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항의방문 및 퍼포먼스를 개최했고, 데이터요금제의 전반적인 개선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번 항의방문과 퍼포먼스 행사에서는 성공회대 대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피켓을 가지고 와서 피켓팅도 진행하고, 직접 통신비 인하를 호소하고, 통신3사의 꼽수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도 진행. 한결같이 빠듯한 생활 속에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호소함.

- 이번 기자회견에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도 참여해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가 철수하고,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알뜰통신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연대 발언도 진행함.

- 성공회대 학생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SKT 항의 방문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도 실제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일 것임.

2. 데이터 요금제로의 전환은 통신재벌 3사의 매출 증대 전략 중 하나, 데이터 요금제 추가 인하기로 나아가야

- 휴대전화의 활용 용도가 과거와 달리 음성과 문자 중심에서, 빠르게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 중. 미래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데이터 트래픽 현황을 보면, 전체 데이터 트래픽 수치는 2만9748TB(테라바이트)에서 13만8121TB로 3년 만에 5배로 늘어났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즉, 통신재벌 3사들의 설명과는 달리,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데이터 수요 증가에 맞춰 새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임. 또 LTE 휴대전화에만 적용이 가능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3G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은 LTE로 전환하지 않으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음.)

1) 시사저널 최근 기사 참조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17>

-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LTE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012년 1월 1.5GB에서 올해 3월 3.4GB로 급증했다”며 “음성통화가 줄고 고사양 게임, 음원 스트리밍 등 데이터 이용이 늘어나는 패턴 변화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중심요금제는 ARPU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음.2) 즉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요금제가 오히려 통신재벌 3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을 중장기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6.5일 SK텔레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서 무제한이 시작되는 구간인 61,000 요금제를 59,900요금제로 인하 조정함(매달 11GB 기본 제공. 부가세 제외). LG유플러스도 6.5일 기존 60,900원에 10GB를 제공하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59,900원으로 인하하고 11GB를 기본 제공하겠다고 발표함. KT는 59,900원 요금제에서 10GB를 기본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KT도 제공 데이터를 늘릴 수 밖엔 없을 것임.

- 이처럼 데이터요금제가 선을 보인 후 일부라도 요금 인하 경쟁이 발생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1천원~1,100원 인하에 그치고 있는 것만 봐도 통신재벌 3사가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함에도 암묵적으로 ‘아주 작은 경쟁’만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음. 막대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선에서 ‘아주 작은 경쟁’만 하고 있는 것임.

3. 참여연대의 통신재벌 3사 공정위 추가 제소, 방통위-미래부에 대한 추가 신고 내용을 통해 본 현재의 통신 이슈3)

2) 이데일리 기사 참조.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newsview?newsid=20150510104455334>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이번 주 내에 제소와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에 제출할 SKT 불공정 약관 신고 요지

- 1)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① 새로운 약관에 대한 동의 ② 이의제기를 통한 기존 약관의 유지 ③ 계약 해지의 권리를 설명해주지 않아서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해 주고 있지 않음. 약관 변경 통지 할 때, 고객에게 선택권을 고지하고 이를 보장해야 함.
- 2) 회사 급부 축소로 인한 약관 변경 시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여 고객의 계약 해제권을 축소시키고 있음. 회사의 급부 축소로 인한 약관 변경 시 고객은 위약금 청구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관 변경 시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음. 회사의 면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함.
- 4) 즉, SKT는 T가족 결합 서비스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따라서 서비스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사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특히 최근 <band 데이터 요금제>에 T가족 할인 범위를 축소한 것은 취소되어야 함.
- 5) 5/20 출시된 <band 데이터 요금제>가 5/22 현재까지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음.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회사는 <band 데이터 요금제>의 약정할인 제외 및 T가족 할인을 축소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여서는 안 됨.
- 6) 고객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국제로밍서비스를 고객이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 이용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 규정도, 고객이 의사표시 해야 이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함.

□ 공정위에 제출할 KT, LG유플러스 불공정 약관 신고 요지

- 1)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① 새로운 약관에 대한 동의 ② 이의제기를 통한 기존 약관의 유지 ③ 계약 해지의 권리를 설명해주지 않아서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해 주고 있지 않음. 약관 변경 통지 할때 고객에게 선택권을 고지하도록 해야 함.
- 2) 회사의 급부를 축소하는 약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여 고객의 계약 해제권을 축소시키고 있음. 회사의 급부 축소로 인한 약관 변경시 고객은 위약금을 청구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관 변경시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음.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야 함.
- 4) 민법상의 일반 원칙을 벗어나서 부당하게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약관 조항이 있음. 이를 시정해야 함.
- 5) 고객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국제로밍서비스를 고객의 의사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야 함.

□ 통신재벌 3사 미래부, 방통위 추가 신고 요지

-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제 선택 시 고객

에게 혼란을 주고 의도적으로 보다 저렴한 요금제인 것처럼 기망하고 있음.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시·고지하게 해야 함.

2) 현재 통신사가 고객으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임. 그러나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폐지해야 함.

3) 통신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2015년 4월 현재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임. 평균 사용량인 3.4GB에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게다가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고객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함.

4) 원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 2013-24호)」 고시에 통신사는 고객에게 통신요금 과금 내용과 적정한 요금제 선택 안내, 할인 및 요금 감면 정보, 계약 해지 시 위약금(해지비용)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11월 규제완화를 이유로 이 고시를 폐지하였음. 장기 분실 상태인 핸드폰의 고객에게 장기 분실 상태임을 일정한 기간 별로 의무적으로 고지해주거나, 고객의 선택할인제(분리요금제) 활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통신사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폐지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 2013-24호)」 고시를 다시 제정하고 통신사에게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임. 또, 데이터요금제 하에서 결국은 가입자

들의 자신의 이용 패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달 요금 고지 시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3달 평균-6달 평균-9달 평균-1년 평균 식으로 가입자들의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해야 할 것임.

5) SKT의 여전한 알뜰폰 영업에서의 부당행위

- 2014년 참여연대가 SKT와 SK텔레콤의 알뜰폰 불법·부당영업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곧 방통위가 제재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지금도 SKT와 SK텔레콤의 알뜰폰 불법·부당영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즉 SK텔레콤이 마치 SKT인 것처럼 특히 노인세대에게 속임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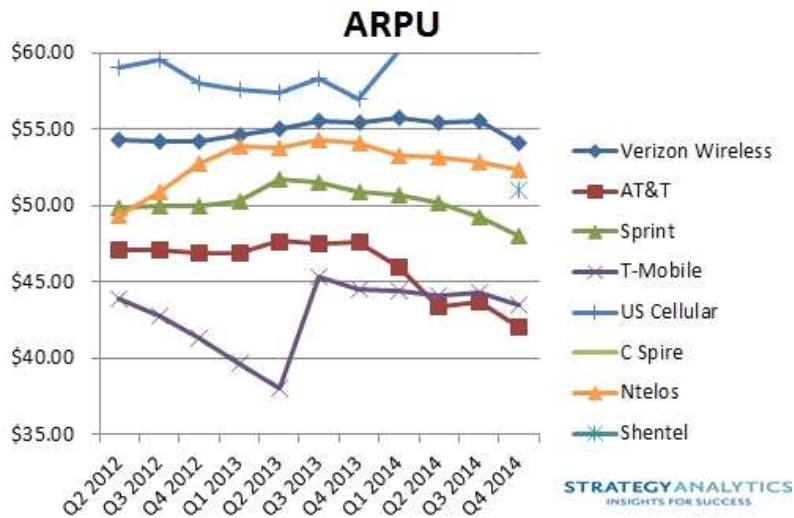
6) 통신재벌 3사가 데이터요금제에서 1588등 전국 대표 번호와 050 서비스 등 지능망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문자·음성 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

- 이 역시 아예 안내를 하지 않고 있음. 차제에 080 등 수신사 부담 고객 문의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기업에 대한 문의 통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도 근절하거나 수신사 부담 문의 통신 서비스로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임.

7) ARPU 산정 방법의 개선

- 지금은 실제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가입 단말기 당(번호) 매출액으로 계산하기에 당연히 보다 저렴한 두 번째 폰이나 세 번째 폰에 가입한 이들과 포함

<그림 1> 미국 통신사의 ARPU 추이



때 ARPU 평균을 떨어뜨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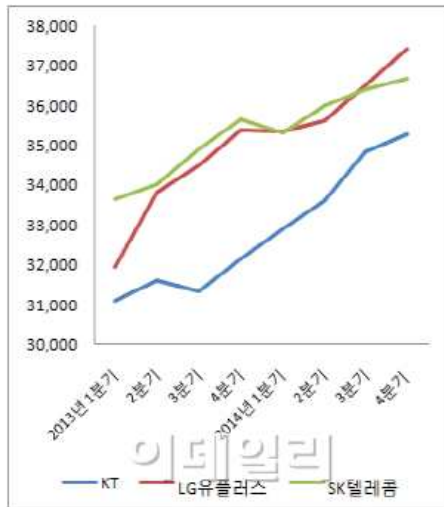
- 또 번호유지 서비스, 선불요금제 등의 가입자의 경우도 가입자당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음에도 ARPU에 포함시켜 평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번호유지 서비스, 선불요금제 등은 평균 산정시 제외하고, 평균을 번호당 매출 평균이 아니라 실제 가입자당 매출 평균으로 계산해야 할 것임. 즉 폰마다 평균이 아니라 사람마다 평균으로. 통계에서도 통신재벌 3사의 ARPU는 3만원대 후반부로 나오지만 실제로 가입자당 조사한 것을 보면 4만원대 후반부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통신재벌 3사가 ARPU가 적게 보이게 하려는 꼼수를 장기간 펼쳐왔는데 이를 정부 당국이 그동안 묵인, 용인해온 것이 큰 문제임. 또 아래 그림 1,2를 보면 미

국의 통신사들의 ARPU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그래도 박리다매 가능), 한국의 통신재벌 3사의 ARPU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역시 통신 정책에서 매우 중요함. 5천8백만 가까운 가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재벌 3사가 충분히 요금 인하와 박리다매가 더 가능한 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마저도 의도적으로 낮춘 ARPU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 것임.

<그림 2> 국내 통신사의 ARPU 추이



출처 : 2015.01.31. 이데일리 <"ARPU를 높여라"..통신3사 LTE 가입자 유치戰>

출처 : <http://www.fiercewireless.com/>

8) 기타 : SKT의 단통법 위반, 데이요금제 저가요금제에서 단통법상 지원금 비례원칙을 어기고 부당하게 차별한 것과, SKT의 데이터 낙전 수입 행태 등

* 참조 : [한겨레] 데이터통화량 선물하기 서비스, 500MB 넘는 용량만 가능하게

제한.

초과 사용때 추가요금 물리면서 못쓰고 버리는 데이터양 나몰라라. 에스케이텔레콤(SKTEL)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쓰다 남은 데이터통화를 가족·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나, '500메가바이트(MB) 이상에 한해'란 조건을 달아 데이터통화 낙전수익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케이티(KT)가 가족끼리 데이터통화 공유와 이달 남은 데이터통화 이월 및 다음달치 당겨쓰기(밀당)를 통해 데이터통화를 알뜰하게 쓸 수 있게 한 것과 대조적이다.

3일 에스케이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의 데이터통화 선물하기 기능을 보면, 남은 데이터통화가 500MB 이상일 때만 100MB 단위로 선물할 수 있고, 19살 이하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다. 이에 기본 제공 데이터통화량이 300MB인 월 3만2890원짜리 가입자는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데이터통화가 갑자기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선물할 때 500MB는 남겨놓게 했고, 청소년들이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데이터통화를 갈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밴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용자와 시민단체 쪽은 데이터통화 낙전수익을 챙기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이통사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모두 데이터통화를 1GB(1000MB) 이상 묶음으로만 판매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월 3만9600원짜리의 데이터통화는 1.2GB, 4만6200원짜리는 2.2GB, 5만1700원짜리는 3.5GB이다. 1GB 이하 묶음으로는 구매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어, 추가로 500MB만 필요해도 어쩔 수 없이 1GB를 사야 한다. 쓰고 남은 500MB는 버리거나, 아까우면 동영상 등을 봐 소모해야 한다. 다 못

쓰고 버려지는 데이터통화량만큼 낙전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쓰다 남은 데이터통화는 500MB 이상만 선물할 수 있게 하면서, 정액 요금제에서 구입한 데이터통화가 소진돼 추가로 사용한 부분엔 무조건 1MB당 20원씩 추가 요금을 물리는 것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인다.

낙전수익 논란은 음성통화료와 공중전화 요금에서도 있었다. 애초 이통사들은 음성통화에 대해 10분을 '한 통화'로 요금을 매겼는데, 실제 통화량이 11분인 경우 20분 통화한 것으로 간주돼 9분어치의 낙전수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3분, 1분, 10초로 점차 좁혀졌고, 지금은 초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있다. 공중전화 낙전수익은 전국 초·중·고에 컴퓨터를 공급하는 재원으로 사용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낙전수익 챙기기 논란을 피하려면, 데이터통화를 100MB 등 소규모 묶음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가족간 공유 등을 통해 알뜰하게 쓸 수 있게 하거나, 초과 사용 데이터통화에 일정량까지는 추가 요금을 물리지 않는 쪽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입자들의 이용행태에 맞췄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 **본론 2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호소. 데이터 요금제 문제 많다! 반드시 데이터 요금 인하되고 개선되어야!!**

요즘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장안의 화제이다. 5천7백만이 넘는 가입자

들, 대다수 국민들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통신 3사와 관련된 뉴스는 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도 결국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으로 모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통신비가 조금이라도 더 인하되었으면 하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인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정부당국과 통신 3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통신비가 대폭 절감된 요금제인지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홍보에 능하다는 여당인 새누리당은 도심 곳곳에 “새누리당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새누리당의 현수막 과장 정치를 비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지난 5월19일 SK텔레콤이 KT·LGU+에 이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통신 3사 모두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되, 데이터용량에 따라 요금이 매겨지는 데이터요금제로의 대전환의 기초가 완성되었다. 먼저,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등장한 것은 분명 환영 만한 일이고, 실제로 음성이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일정한 하향 조치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6만 6천원쯤에서도 통신3사의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점이 여전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체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은 이미 데이터 중심 이용의 패턴으로 옮겨갔고, 또 데이터사용량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한다 해도 그것으로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부도 혜택을 보는 층은 300만명 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직원

등 일부 직종과 중장년층 등 일부 연령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5천7백만이 넘는 가입자들(일부 국민들은 2~3개의 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 수 보다 더 많다) 중 300만을 뺀 나머지, 사실상 대다수인 5천 4백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모든 통신사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데이터 중심요금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통신 3사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한 전략상' 내놓은 요금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미 통신3사는 '단지 통신사들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국면에서 2015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맞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통신 3사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심 자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봐야할 중요한 포인트이다.⁴⁾ 참고로, 통신 3사의 2015년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SK텔레콤 4,026억 원(전년 대비 59.5% ↑), KT 3,209억 원(전년 대비 135.3% ↑), LG유플러스 1,547억 원(전년 대비 36.7% ↑)으로 통신 3사는 요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둘째, 통신 3사나 정부당국이 실제로는 32,890원대의 무제한 유·무선통화 요금제가 등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9,990원의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사실상 온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통신 3사의 요금제 공시 방식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 비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통신 3사가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4)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 제공하고도...KT가 웃는 까닭 : 한겨레 5.12일자 기사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2274012>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하는 것을 정부 당국이 계속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까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이번 데이터 요금제에서 가장 낮은 요금제인 32,890원대의 요금제 역시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며, 특히 평소 32,890원의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지불해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요금제로의 변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요금제에서는 데이터가 300mb, 동영상 10분정도 보면 소진되는 극히 미량의 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는 국민들은 더 비싼 요금제로 가거나, 32,900원대 요금제에서 추가로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생각해볼수록 껄뻘한 구조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32,900원 요금제에서도 최소 1기가의 데이터는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가장 결정적이 문제점은 통신 3사 모두가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료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 등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은 기본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본료는 11,000원은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늘리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사용량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기에 매우 부당하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된다면 데이터 요금제의 모든 구간에서 11,000원씩의 요금이 하향 조정되는 큰 효과가 발생한다. 통신 3사에서도 이를 못 받아들일 수준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가 현행 6만 6천원대에서 기본료를 폐지하면 5만 5천원~6천원대로 하향 조정될 것인데, 이 역시도 국민들의 평균

ARPU(가입자당 월 매출액)인 3만원대 후반대의 금액보다 2배 가까운 금액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통신 3사의 안정적인 수익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 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면 마치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닌 것이다.

다섯째, 이번 데이터 요금제에서는 가입 기간 약정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요금제에서 가입기간 약정 할인을 받는 것과 비교해서 데이터 요금제로 전환이 별로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 통신 3사가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기가대를 넘어서는 3기가~5기가 사용량 구간의 요금제는 내놓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언뜻 보기에 다양한 데이터 요금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3기가~5기가대만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선택지는 없는 것이다. 결국 데이터를 2기가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6만원대 안팎의 6기가 요금제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질곡이 있는 셈이다.

대략 살펴보아도 데이터 요금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일부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꾸준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자원으로 국가의 사용 지원을 받고 있고, 망 접속 비용과 같은 통신 원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망 설치가 이미 완료된지 오래고, 무선은 유선에 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리고 데이터 요금제 전반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인데, 지금 당장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폐지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

로도 기본료 폐지는 물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이용량 확대,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제의 하향 등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표 10> KT·LGU+·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 비교

| 통신사 | 요금제 | 월정액 (vat포함) |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 데이터 제공량 |
|------|---------------------------|----------------|--------------|----------|
| LGU+ |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 유 | 32,890 | 무선 무제한+기타30분 | 300MB |
| KT | 데이터선택 299 | 32,890 | 무선 무제한+유선30분 | 300MB+밀당 |
| SKT | band데이터29 | 32,890 | 유무선 무제한 | 300MB |
| LGU+ |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 유 | 37,290 | 무선 무제한+기타30분 | 1GB |
| KT | 데이터선택 349 | 38,390 | 무선 무제한+유선30분 | 1GB+밀당 |
| SKT | band데이터36 | 39,600 | 유무선 무제한 | 1.2GB |
| LGU+ |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 유 | 42,790 | 무선 무제한+기타30분 | 2GB |
| KT | 데이터선택399 | 43,890 | 무선 무제한+유선30분 | 2GB+밀당 |
| SKT | band데이터42 | 46,200 | 유무선 무제한 | 2.2GB |
| SKT | band데이터47 | 51,700 | 유무선 무제한 | 3.5GB |
| LGU+ |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 유 | 54,890 | 무선 무제한+기타30분 | 6GB |
| KT | 데이터선택499 | 54,890 | 무선 무제한+유선30분 | 6GB+밀당 |

| | | | | |
|------|-----------------------|---------|---------------|---------------------------------|
| SKT | band데이터51 | 56,100 | 유무선 무제한 | 6.5GB |
| LGu+ |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 65,890 |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 무제한 10GB+ 일 2GB QoS 3Mbps |
| KT | 데이터선택599 | 65,890 | 유무선 무제한 | 무제한 10GB+일2GB QoS 3Mbps |
| SKT | band데이터61 | 67,100 | 유무선 무제한 | 무제한 11GB+ 일 2GB QoS 3Mbps |
| LGu+ |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 76,890 |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 무제한 15GB+ 일 2GB QoS 3Mbps |
| KT | 데이터선택699 | 76,890 | 유무선 무제한 | 무제한 15GB+일2GB QoS 3Mbps |
| SKT | band데이터80 | 88,000 | 유무선 무제한 | 무제한 20GB+ 일 2GB QoS 3Mbps |
| LGu+ |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 109,890 |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 무제한 30GB+ 일 2GB QoS 3Mbps |
| KT | 데이터선택999 | 109,890 | 유무선 무제한 | 무제한 30GB+일2GB QoS 3Mbps |
| SKT | band데이터100 | 110,000 | 유무선 무제한 | 무제한 35GB+ 일 2GB QoS 3Mbps |

*출처 : 각사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유선통화 무제한으로 변경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 참조 : 유플러스의 경우 아래 뉴 데이터요금제를 내놓고, 이어 6.1일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59,900원(부가세 제외)으로 인하하기도 함.

<표2> New 음성무한 데이터 요금제

| 요금제 | 월정액 | 음성/문자 | 데이터 | | 부가혜택 | HDTV 전용 데이터 |
|-----------------------------|--------|--------------|-------|-------------------------|---------------------------------|-------------|
| New음성무한 데이터 29 ⁹ | 29,900 | 무제한 (유무선) | 300MB | | U+ HDTV light (지상파/CJ 제외) | 300MB |
| New음성무한 데이터 35 ⁹ | 35,900 | | 1.3GB | | | 600MB |
| New음성무한 데이터 41 ⁹ | 41,900 | | 2.3GB | | | 1.1GB |
| New음성무한 데이터 46 ⁹ | 46,900 | | 3.6GB | | | 2.2GB |
| New음성무한 데이터 50 ⁹ | 50,900 | | 6.6GB | | U+ HDTV | 3.3GB |
| New음성무한 데이터 60 ⁹ | 60,900 | | 무제한 | 11GB+일 2GB QoS 3Mbps | | 무제한 |

※ 6/1~6/30까지 New음성무한 데이터 29.9~ 46.9고객 대상 U+ HDTV 제공

※ 약정할인 적용 없음.

○ 별첨 1 : 참여연대 등의 방통위·미래부 신고에 대한 결과

방통위의 SKT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통신사 협력업체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제재 방침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 통신사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1. 방통위가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고, 또 통신사들의 협력업체에서 발어진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통신시민단체들과 함께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방통위가 조사를 진행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 협력업체들과 일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가 몇백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 사안인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2. 또, 최근 통신서비스 영역에서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남용하여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까지 그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통신당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그를 통한 궁극적인 시민·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참여연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과 2014년 5월 27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SKT와 KT의 알뜰폰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

<SK텔레콤의 경우>

-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 ②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5) 신고서 전문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2828> 에서 확인 가능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 ④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 ⑥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KT의 경우>

- ① KT는 현재⁶⁾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
- ②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
- ③ MVNO업체의 사업 인력 유출 행위
- ④ KTIS가 기존사업자의 유통망 대상으로 총판 모집

6) 2014년 참여연대가 신고할 당시 기준, 지금은 KT등 통신3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자회사를 진출시켰는데, 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꼭 철수해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해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체인 SK텔링크가 마치 SK텔레콤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서 텔레마케팅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제재 방침을 정하고,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다만 SKT와 KT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제재 수준이 미약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둔다. 불법·부당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에 일부 유형만 제재를 받고, 그것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SKT와 KT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또 통신공공성포럼, '진짜사장나와라운드본부'와 함께 2015년 2월 26일, 3월 30일에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협력업체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를 잇따라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5월 2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6개 업체에 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한 것을 우리는 역시 환영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신당국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만큼은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예방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최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세미나(5/11일)에서 잘 발표되었듯이 SKT의 시장 지배적 지위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시장지배력 전이

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방송·통신 영역에서 SKT의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에도,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발전에도, 시민·소비자들의 궁극적인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SKT가 이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알뜰폰에도 진출하고, IPTV, 유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즉, SKT의 모바일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알뜰폰·IPTV(케이블시장)·유선인터넷으로도 부당하게 전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SKT의 시장지배력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 행위를 엄밀하게 규제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뿐만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및 막대한 초과이익 발생·전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SKT의 지배력이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으로까지 전이되거나 SKT로의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 별첨 2 :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압도적 1위 사업자'에 대한 정부당국이 비대칭적 규제와 공공적 접근이 필요한 때

1. 통신요금, 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인 SKT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와 통신당국의 차별적(형평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

- 5:3:2의 고착된 구도로는 통신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2위, 특히 3위 사업자의 점유율과 영업이역이 개선되고 진척되어야 공정한 경쟁, 소비자후생을 위한 의미 있는 경쟁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SKT에 대한 통신당국의 차별적 규제 정책이 필요함.

- 특히, SKT가 그동안 막대한 초과이익을 달성해온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타당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SKT역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임.

2. 시민, 소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쟁 구도

- 예를 들면, SKT 30%, KT 25%, 유플러스 25%, 알뜰통신 20%는 영원히 불가능한가?

- 제 4이동통신 진출 여부 변수

- 최근 이상호, 심상정 의원의 각각 법안 발의와 주창, 그리고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기본요금 폐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전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폐지 및 대폭 인하 되기 위해서도 1위 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3. 단통법 이슈 :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문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 제조사, 통신 3사의 지원금에 대한 각각의 분리공시는 꼭 진행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도대체 제조사가 얼마의 지원금을 냈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 또 통신요금 투명성과 인하 이슈에 비해 단말기 가격의 폭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안되고 있는데,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통신3사의 전적인 책임으로만 논의되는 것은 문

제. 단말기 폭리와 담합 의혹 문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문병호 의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폰 가격수준은 2년 연속 세계 1위 이고 2위, 고급폰도 3년 연속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인데 미국과의 소득수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실상 고급폰 가격도 미국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일반폰 가격은 인하 추세, 고급스마트폰 가격은 2년간 28.2% 인상, 2014년 가계소비 중 통신장비 비용 168.2%↑, 통신요금 비용 12.4%↓, 문병호 의원 “가계 통신비 절감 위해 단말기가격 인하정책 추진해야”)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처럼 휴대폰 가격이 높은 것은 삼성과 엘지의 제조사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분리공시제를 박근혜 정부가 좌절시킨데에 있음. 참여연대의 단통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당한 국내이용자 차별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통법 개정안에 외국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단말기 가격 책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단통법이 국내 이용자들간의 차별과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의 국외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피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임.

4. 압도적 1위 사업자의 결합상품 규제 문제

- 얼마 전 “13년 된 인터넷회선 50만원”에 거래된다는 기사가 있었음(맨 아래 별첨) 기사 내용은 10년 넘은 인터넷 회선이 무려 50만원대에 팔리는 등 통신/방송 결합상품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13년 된 장기 회선이 50~6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희귀한 15년짜리는 70~80만원을 호가한다는 내용이었음. 이는 한통신가가 결합상품 ‘온가족할인’을 이용하면 가족(최대 5인) 통신요금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위해선 가족의 유무선 가입 연수 30년을 채워야 하는데, 부족한 사람들이 유선망 장기회선으로 이를 메우는 것이라고 함. 장기회선 구입비용은 50% 요금할인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함.

-
- 이처럼 결합상품 과열은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발제 내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결합상품 등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한국소비자원 4/21 발표) 등의 민원 증가는 소비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구체적 사례임.
 - 기본적으로 결합할인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앞에 발제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결합할인이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
 - 결국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욱 우수한 서비스와 가격경쟁 상품의 출현을 차단하여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5.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 논란 : 현행 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와 소비자 후생에 더욱 적합

- 또한 요금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황태희 교수님 지적과 같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개입은 확대되어야 함.
- 사전규제는 무조건 과잉규제로서 예를 들면,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1위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사전 심사조치 곤란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관련해서 이인호 교수의 연구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막대한 초과이익(21.7조, '00~'13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해야 할 것임

- 또, 박추환 교수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의 1위 사업자의 압도적 지배력 문제를 해결한다면(예를 들면 시장점유율 구도가 5:3:2에서 3:3:3 형태로 개선되거나 변화한다면)이를 통해 연간 8,5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후생 증대가 가능하다고 함

6.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소개

- 국민들은 매우 절실히 단말기·통신요금 인하를 원하고 있음.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주)우리리서치를 통하여 2014년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⁷⁾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압도적인 비율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며(매우 비쌌 83.7%, 다소 비쌌 11.5%), 이동통신3사 통신비도 비싸다고 느끼고 있음(매우 비쌌 56.1%, 다소 비쌌 37.0%). 이러한 비싼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이동통신비 월가공개에 대해서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에 달하였음.

7. 관련 기사 : 2015.4.21.일자 전자신문 기사 등

13년 인터넷 회선이 50만원...결합시장 '과열'

-
- 7) ○ 조사시기 : 2014년 11월 10일 ~ 11일 ○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 조사방법 :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1,000명 / 95% 신뢰구간에서 ±3.1%p
○ 조사기관 :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10년 넘은 인터넷 회선이 무려 50만원대에 팔리는 등 통신·방송 결합상품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결합상품 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시장이 과열되면서 결합상품 규제 공방이 한층 가열될 조짐이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 있다며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후발사업자는 결합상품이 불공정경쟁을 유발한다며 규제 장치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와 중고판매사이트를 종합하면 한 유선인터넷 사업자 13년 장기회선이 50만~6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1년에 4만원씩 가격이 형성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00% 급등한 가격이다. 희귀한 15년짜리는 70만~80만원을 호가한다. 이 회사는 약관상 명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장기회선 가격이 들쭉이기 시작한 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후다. 한 통신사가 결합상품 '온가족할인'을 이용하면 가족(최대 5인) 통신요금을 50%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를 위해선 가족의 유무선 가입연수 30년을 채워야 하는 데 부족한 사람들이 유선망 장기회선으로 이를 메우는 것이다. 장기회선 구입비용은 50% 요금할인으로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다.

이처럼 결합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통신사가 단통법 이후 결합상품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기가 어렵게 되자 결합할인 혜택을 강화

해 기존 가입자는 묶고 신규가입자는 끌어오는 전략을 편 것이다. SK텔레콤(TB끼리 온가족무료), KT(올레 패밀리박스), LG유플러스(가족무한사랑클럽) 등 통신 3사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과열은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1일 발표한 '3월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상담건수는 1230건으로 전달(964건)보다 27.6%나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결합상품 등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를 주요 상담내용으로 꼽았다. 이동전화 결합상품 93.7%(2013년)가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두 상품은 결합시장의 핵심이다.

불공정거래 이슈도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4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서 △시장지배력 전이 △결합 약정계약 고착화를 결합상품의 잠재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품과 일반 상품을 결합하면 일반 상품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합으로 약정계약이 고착화되면 가입자 이동이 줄어 경쟁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됐다.

LG유플러스, KT, 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SK텔레콤 결합상품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소비자 혜택을 줄여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결합으로 묶으면 전체 통신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결합상품을 통해 연간 1조3000억원 정도 가계통신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는 20일 결합상품 만족도가 60%에 달하고 41%는 결합판매 규제에 부정적이라는 방송통신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합상품 문제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딜레마에 빠졌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혜택 둘 다 지켜야 하는 가치인데, 둘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가입단계 문제점을 규제할 고시 개정안을 상반기 공개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하반기까지 결합상품시장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토론문

- | | |
|------|-------------------------------|
| 패널 1 | 이현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
| 패널 2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 패널 3 |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 패널 4 | 최 현 (정의당 통신비 TF 간사, 기획홍보실 국장) |

<토론1>

ICT 산업 발전과 데이터 공공성 보장 방안

이현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

1. ICT 산업 발전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뒤처져 나라를 잃는 큰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산업화는 뒤졌으나 정보화에 까지 뒤질 수 없다는 국가적 결단 아래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통신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고, 미국 이외의 국가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개설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CDMA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수준 등에서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통신 기업들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 기업들은 원가보상률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고 있고,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상장회사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고율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 기업들이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면서 적정 수준 이상의 독과점적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2.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통신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필수적인 재료로 하는 산업입니다. 전파법 제3조는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전파환경의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파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

8·15 해방 이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는 통신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통신 산업은 정부의 통제 아래 국영산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정보통신산업을 일으키는 데에는 전화국으로부터 정보통신부에 이르는 정부기관과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기업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통신 산업의 기틀을 잡은 것에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고 전파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최대 활용의 원칙

이 전파자원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통신 서비스는 완전히 민영화, 사유화되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통신회사의 지분 49%를 해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나 통신서비스 공공성 제고보다는 높은 이윤과 배당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고스란히 이는 다시 통신비 고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데이터 공공성 보장 방안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엘 고어는 정보화 시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y)를 건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엘 고어의 할아버지는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인 고속도로 건설을 주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도로는 산업화의 젖줄입니다. 도로 없이는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기 어렵고 산업이 꽃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들여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물류를 원활히 함으로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도로가 담당했던 역할을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통신망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은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수단이 됩니다.

국가가 산업화를 위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의 건설 및 유지 보수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영리기업에 맡겨두고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보통신망의 기초가 되는 전파가 모두 국유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일반국도의 건설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그 이용을 보장하듯이 정보통신망에 있어서도 국도와 유사한 정도의 정보통신망을 국가가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들에게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비용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과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축되어 있는 국가재난망 등의 정보통신망을 잘 활용하거나 주파수 할당의 조건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 기업이 일정한 범위의 데이터 통신(예를 들어, 1인당 LTE 1기가 정도)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요금제 도입의 긍정성과 고려해야 할 지점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하고 음성중심의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음성을 기본서비스로 제공하여 소비자 후생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수년전부터 데이터중심요금제로의 개선을 요구해왔던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음성사용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졌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데이터중심요금제 이후 새로운 시간선택형 데이터 상품을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함에 따라 자율적인 시장경쟁이 촉발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다만, 모든 고객이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혜택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성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가 데이터중심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자칫 통심요금 부타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중심요금제로의 변경시, 기존 요금제보다 하위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이용자가 변경할 때 기존 약정에 따른 요금

감면 폭, 위약금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내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에 소비자분들이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의 사항의 안내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며, 무제한 요금이라고 하지만 일정 데이터량을 사용한 이후에는 속도가 느려지는 점 등의 안내가 소홀한 점이 있어 소비자 기만적인 광고, 홍보에 유관부처의 관리감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통신시장에 경쟁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데이터 중심요금제 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음성 중심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요금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정부의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단말기 구입에 있어 단말기 거품과 담합,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선택의 폭 제한 등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합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토론3>

별도 복사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토론4>

기본요금제 폐지, 와이파이 확대, 데이터 기본 사용량 도입으로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실현하자.

최 현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국장)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 후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이익 증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 후 올 초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KT는 지난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3200억 원으로 130%로 크게 뛰었고, LG유플러스도 1547억 원으로 36%, SK텔레콤은 4,0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5%나 증가했다. 통신사 측은 이번 영업 이익 증가를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이익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분명히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비 감소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발표된 데이터 요금제

이번 요금제 출시는 이러한 폭발적인 영업 이익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조치라고 보여진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특별한 통신 요금 인하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에 대해 통신3사들은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고 이에 기존의 요금체계와 다른 새로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것이다. 분명 통신3사들의 요금 인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요금제에 여러 가지 꼼수를 숨겨놓고 발표한 것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

3.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데이터 요금제의 출시로 인해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약 200만명의 가입자들이 데이터 요금제로 전환했고 이 중 7~80%가 3만원대 요금제로 전환신청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은 분명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존에 ‘위약4’ 를 쓰고 있는 고객의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데이터 요금제를 ‘조삼모사’ 식 요금인하라고 비판하는 소비자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량이 너무 부족하여 결국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는 것을 부추기는 요금제가 아니냐는 비판도 쏠쏠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4G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량은 3.3기가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적합한 요금제는 SK만이 갖고 있고(3.5기가 데이터 무료, 나머지는 2기가), 그 다음 단계는 6.5기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 기본요금제 폐지는 왜 안 되나?

기본요금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선로 개발 등에 투자하는 돈에 대해 더 이상 부과를 하지 않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 특히 2G나 3G를 쓰고 있는 노인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에게 기본요금제 1만1천원을 폐지하는 것은 통신 복지 차원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통신 기본료 인하와 관련 한 통신 3사 관계자는 “기본료 1만원을 줄이게 되면 6조원 이상의 매출이 빠지면서 이통 3사는 적자에 처하게 된다” 며 “우리나라 IT 성장을 위해 통신업계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인하는 투자 감소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없는 독과점 구조에서 엄청난 이윤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통신3사가 ‘투자 감소 및 경쟁력 저하’ 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린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 측은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꾸준히 밝혀왔는데 통신도 수도와 가스와 같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라고 생각한다면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기본요금제’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충분히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전화기 설치에 들어가는 보증금을 폐지시킬 때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있었지만 결국 폐지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월 3만원을 내는 요금제에 월 1만원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자체가 모순이다. 이제 설비 투자 비용으로 부담시키는 기본요금은 최소화하고 사용량이 적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대한 적은 부담을 지우는 통신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5. 통신3사가 4G를 투자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WIFI 확대로 3G 유저를 보호해야 한다.

유무선 전화가 무료로 바뀌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되는 것은 기존 유저들의 4G 전환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신 사용자의 2/3가 4G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약 1,000만명 남짓한 수의 국민이 3G를 쓰고 있는데 이동 통신3사는 3G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를 중단하고 있다.

최근 통신3사는 3G 사용자들을 위한 WIFI망 확대 보다는 LTE 중계기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3G 유저를 위한 요금제 혜택도 폐기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상품에 대해 우선 배려를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상 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약 1천만명에 달하는 3G 유저층이 버젓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며 이 역할은 민간이 아닌 정부 측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3G 사용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 방식은 공공 주도로 질 좋은 무료 WIFI망을 확대하는 길 밖에는 없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SK, KT, LG U+의 와이파이망 통합 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망 통합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개설하는 공공 와이파이 망을 늘리고 기존 통

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와이파이망을 사들여서 무료 통신 인프라를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미래부가 통신3사에게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통신 인프라를 늘리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6. 데이터 기본 사용량을 도입해 최소한 영화 한 편은 맘 편히 보게 해주자.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이제 통신비의 핵심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전화 통화량보다는 데이터 사용량이 요금의 주요한 등급이 되게 된 것이다.

(그림1 : 조선비즈 6월 4일자 보도)

문제는 이번에 출시한 저가 데이터 요금 상품을 보면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턱없이 작다는 것에 있다. 통신3사가 가장 자랑스럽게 광고하고 있는 3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는 고작 300MB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요금으로 월 1만원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전 국민들에게 통신3사가 내놓는 기본 데이터가 고작 300MB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비즈에 보도된 옆의 자료에서 보듯 실시간 TV를 저화질로 1시간만 봐도 데이터 300MB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영화 한 편을 고화질로 감상하려면 적어도 데이터가 1가가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게임은 고작 14시간밖에 할 수 없고 음악은 75곡 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냥 서민들은 카톡이나 그것도 텍스트만 열심히 쓰라는 얘기다. 매월 기본요금 1만원, 매월 4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통신3사가 국민에게 기껏 줄 수 있는 데이터가 300MB밖에 안된다니 헛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결론은 한 가지다. 정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데이터량을 정해주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데이터 기본 사용량을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이 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소 전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4G 기준 3.3기가)의 30% 수준인 1기가에 대해서는 통신3사가 무상 제공해야 하며 이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정부는 매년 적정 데이터 무료 기준을 정하고 공시하여 서민들의 데이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7. 6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심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통신비 인하의 문제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과열 경쟁을 제어한 것도 결국 정부였다. 하지만 정부가 과열 경쟁을 제어한 덕분에 생겨난 막대한 이윤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통신3사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부는 최대한 개입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 데이터요금제 비교

| 요금제 | SK텔레콤 | | KT | | LG유플러스 | |
|---------|------------|---------|-------------|---------|---------------|-----------------|
| | 월정액 | 기본 데이터 | 월정액 | 기본 데이터 | 월정액 | 기본 데이터(+4DTV전용) |
| 2만9900원 | 300MB | 2만9900원 | 300MB | 2만9900원 | 300MB(+300MB) | |
| 3만6000원 | 1.2GB | 3만4900원 | 1GB | 3만5900원 | 1.3GB(+600MB) | |
| 4만2000원 | 2.2GB | 3만9900원 | 2GB | 4만1900원 | 2.3GB(+1.1GB) | |
| 4만7000원 | 3.5GB | 4만9900원 | 6GB | 4만6900원 | 3.6GB(+2.2GB) | |
| 5만1000원 | 6.5GB | | | 5만900원 | 6.6GB(+3.3GB) | |
| 6만1000원 | 11GB+매일2GB | 5만9900원 | 10GB+매일2GB | 6만900원 | 11GB+매일 2GB | |
| 8만원 | 20GB+매일2GB | 6만9900원 | 15GB+매일 2GB | 8만원 | 20GB+매일2GB | |
| 10만원 | 35GB+매일2GB | 9만9900원 | 30GB+매일 2GB | 10만원 | 35GB+매일2GB | |

*이러한 요금제는 유·무선 음성통화, 문자서비스 무제한, 부가서비스 별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입하여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 인하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에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요금제 폐지’ 문제,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 ‘통신비 심의위원회’ 설치 문제, ‘알뜰폰 활성화’ 까지 주요한 쟁점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다.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기본요금제

폐지 등에 대하여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과정에서 미래부 측은 분명하게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비부담을 줄이겠다’ 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통법 제정 후 진행된 통신비 인하는 아직까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요금제 폐지, 데이터 기본 사용량 도입 등 보다 과감한 정책 채택을 통해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일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메 모